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7월 1차

주요 현안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경제적 활성화

-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 분야 사회경제적 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논의
-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 예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6.3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0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6.30.]
https://www.mohw.go.kr/react/all/1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5EQ=366243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입양 희망 친생부모에게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화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관리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이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 제공 의무화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6.30.]
https://www.mohw.go.kr/react/all/1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5EQ=366242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 가능

-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
-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재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 가능하며,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 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07.04.]
https://www.mois.go.kr/f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skd=BBSMSTR_0000000000008&nttlid=85445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 ☑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은 2020년 6월과 2021년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지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7.0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5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을 시행

- ☑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7.0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6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2021-06-29	보호 대상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제38조제1항제2호, 제39조의2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2021-06-30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안 제16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6인)	2021-07-02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가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으로 우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 포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2021-07-06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2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1-07-08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1-07-08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척 등의 청구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4조의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1-07-08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무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2 신설)	
여성노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2021-07-02	경력단절여성 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1-06-28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형법'상 친족상대로 보호의 적용으로 인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법·제도 운영에 있어 드러나고 있는 여러 미비점 보완(안 제32조의9 신설, 제59조의3제1항, 제59조의4, 제86조제3항제2호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단서 신설, 제59조의11제2항제5호, 제59조의13제2항 신설, 제59조의16 신설, 제88조의3 신설)
젠더폭력·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규희의원 등 10인)	2021-06-29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 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 조력인이 수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1-06-29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신고되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시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5조의5 신설, 제7조의4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2021-06-30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 사건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와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은 제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안 제299조제2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	2021-07-01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	2021-07-01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 처벌(안 제4조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2021-07-01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 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명용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35조 및 제63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2021-07-01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용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18조 및 제66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0인)	2021-07-0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하여진 간음 또는 추행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안 제92조의9 및 92조의10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1-07-06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 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게 함(안 제28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2021-07-09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안 제5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2021-07-05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연령·용모·키·체중·임신 여부·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학력·출신학교·종교·혼인 여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 과정의 공정화 도모(안 제7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2021-07-05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 여부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 과정의 공정화 도모(안 제7조제2항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1-07-05	채용 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화 도모(안 제4조의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2021-07-05	혼인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할지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 보호(안 제4조의3 및 제17조)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일자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6.28	쿠키뉴스	"여직원은 뭘 붙는 지마 물어봐" 여전한 성 고정관념	김동식 선임연구원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6280228
7.7	뉴스1	"말수영역 된 돌봄, 인프라 구축 시급...사회가 책임져야"	마경희 연구위원	https://news1.com/view/7d-N5X20210707_0001504087&ID=102018p-ID=102020
	이데일리	"재정 의존하면서 인건비 절감하는 돌봄서비스...국가 책임 강화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9312662911224&mediaCodeNo=2578&OutLink=Y
7.9	쿠키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여성 건강·재생산권' 위협한다	김동식 선임연구원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080328
	여성신문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1

유관기관 연구동향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다양한 인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높은 합계출산율이 출생아 수 및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실증적으로 고찰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Focus, 2021.07.12.]
<https://www.kihasa.re.kr/public/vol/gular/focus/view?seq=37125>